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군인 10명 중 1명, 성추행 당한 경험 있다”

일마전 성추행 당한 사병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군대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범죄가 자행된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명예를 벗기 위해 노력하던 군은 또 다시 성범죄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되었다.



안주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최근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위험수위가 넘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9일 휴가 중에 투신 자살한 김모 일병. 그의 자살 이유가 고참의 성추행을 견디

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다.

그런데 연이어 소속부대 대대장인 현역 중령이 당번 병인 부하 사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영관급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실, 사병이 여군장교를, 동성장교간의 성추행 등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실태 보고서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조사에 따르면, ‘군생활 중 성적 접촉행위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0명 중 1명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역병과 제대 일년 이내 예비역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그러나 실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지워고 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군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성추행을 장난이라고?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군의 특성상 상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조건에서 상관의 성적인 요구 등 부당한 요구나 명령을 거부한다 치더라도 또 다른 구타나 가혹행위, 일차례, 따돌림 등을 당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군생활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75% 이상 ‘모른 척하거나 참는다’는 답변이었다.

한국사회의 ‘남근숭배’ 풍조는 남자들은 차게 키워야 한다면서 아랫도리를 벗겨놓기도 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여겨왔다. 그래서 무감한 것일까? 내무반에서 신참병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신고식, ‘해바라기’, ‘자위행위’ 강요, 고참의 ‘동침’ 요구 등, 더 이상 웃어넘기거나 더 이상 방치할 때가 아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그냥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군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가능케 하는 그 장난에 이제 총지부를 찍어야 한다.

‘성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최근 일부 군에서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군인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인들의 큰 호응이 있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고 전군에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군인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경미한 처벌

또한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계간 및 기타 추행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방지특별법에 의해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 규정을 보완 적용할 수 있으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육군은 성추행 사례가 빈발하자 지난달 14일부터 전 부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성 경험담 말하기 △특정부위 때리기 △특정부위 만지기 등 24건을 적발해 관련자 6명을 형사 입건하고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육군은 성범죄를 은폐하는 지휘관을 엄중 분책하고, 군형법상 1년 이하로 규정된 성추행 처벌을 10년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처벌강화 조치는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육군은 이날 종합대책을 마련해 품성과 자질에 결함이 있는 간부를 엄격히 가려내 조기 전역시키고,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통해 변태성욕자를 식별하며, 장병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중대에서 사단급 부대에 걸쳐 군종장교와 군의관 등을 병영전문상담관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내 성직자 등 민간상담관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 모든 대책들이 근본적인 조치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군은 열린 자세로 민간과 협력하여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병들의 경우 입대시부터 제대시까지, 장교 및 영관급들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단 성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사병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권리복득들이 만들어지고, 인권이 지켜지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인권교육이 정착되어야 한다.

언론이 잠잠해지면 금방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기강과 군의 사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도대체 군대에 가야하는지 회의하는 젊은이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하는지 걱정하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이다.

군의 특성상 상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조건에서 상관의 성적인 요구 등 부당한 요구나 명령을 거부한다 치더라도 또 다른 구타나 가혹행위, 열차레, 파들림 등을 당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